

제4장

자발적 개선사례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 1 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 **평가대상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국세청**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

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기타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재산세과장
4. (생략) 학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

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

2. 탈세제보를 접수한 최종 처리관서의 장은 탈세제보 접수 즉시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 황

- 국세청장이 접수한 탈세제보는 세목에 따라 처리부서가 다르나 규정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문 제 점

- 탈세제보를 접수한 민원인이 처리부서나 처리과정 등 진행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개선방안

- 탈세제보 접수시 최종 처리관서장이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 탈세제보 접수·처리담당을 현행에 맞게 명확화 함으로써, 민원인이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등을 쉽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p> <p>3. <신 설></p> <p>4. <신 설></p> <p>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p> <p>① (생략)</p> <p>2.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에서 접수 즉시 제보자에게 접수사실 및 탈세제보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p> <p>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기타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재산세과장</p> <p>4. 대부업자,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학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 2과장</p> <p>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p> <p>① (생략)</p> <p>2. 탈세제보를 접수한 최종 처리관서의 장은 탈세제보 접수 즉시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탈세제보는 이를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p>

- **평가대상**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제9조(품목번호 확인서의 발급) ①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는 본인이 수출입 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류원장에게 품목번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HS품목번호)를 문의하는 제도는 수출입 통관실적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중
 - －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
 - －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민원회신)

문제점

-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수출입실적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거부 등)

*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토록 규정

** 그간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이 있는 물품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민원회신의 일종인 “품목번호 확인서”로 운영하여 왔음

■ **평가대상** : 통일부 ‘12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통일부

관련 규정 신설

(당 규정은 지침으로서 조문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2011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분야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수준
 - 위법 부당한 집행 빈도 5.14점(중앙행정기관 평균 8.40점)
 - 위법 부당한 집행 규모 3.35점(중앙행정기관 평균 7.94점)

문 제 점

- 우리 부 총 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0.9% 수준)으로,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예산낭비 요인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대 및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 직무 관련성 입증 필요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 설〉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p>

■ **평가대상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조달청**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가격 등 제안서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록 품목수 및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른 각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

구 분	'06	'07	'08	'09	'10	'11
MAS 품목수	89,221	185,235	240,764	297,585	273,070	297,190
등록 업체수	982	2,078	2,938	3,732	4,082	4,405
공급실적(억원)	14,836	35,251	44,354	60,706	56,222	55,527

문 제 점

-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는 1억원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어, 5천만 원 초과구매 시 경쟁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원칙과 상이
- 수요기관에서 5개사 미만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 경쟁 자체를 취소할 경우 사유가 불분명하여 업체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 예시 : 수요기관 요구규격 및 예산범위에 적합한 계약상대자가 5개사 이상인 데도 불구하고 2개사에게만 제안요청을 하여 경쟁을 제한

개선방안

- 2단계경쟁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불공정경쟁 방지차원의 제안요청기준을 마련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2조(제안요청 기준)</p> <p>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9조(가격 등 제안서제출)</p> <p>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 단서신설(개정안 밑줄)</p> <p>－ 제안서 제출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업체·수요기관 및 업체간 담합의 우려가 있어, 담합 등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조치 필요</p> <p>○ 단서신설(개정안 밑줄)</p> <p>－ MAS에서 가격제안서 등을 제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금액한도가 1억원으로,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금액(5천만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체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 필요(2단계경쟁의 상한액 검토)</p>

■ **평가대상 : 통계교육원 학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통계청**

제7조(교육비의 환불)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시작 이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분을 환불한다. 다만,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 중단 또는 제10조에 따른 퇴교처분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국가 통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교육원의 교육 실적이 매년 증가

〈 통계교육 실적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 과정수(개)	68	77	103	132	157
교육 인원수(명)	9,092	11,161	14,516	15,884	21,629

- 통계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통계교육원 학칙(예규)에 규정*됨

* 제6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① 교재 발간 및 구입,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 제 점

- 교육 시작이후, 교육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환불하는 잔여분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여 논란 발생 소지

〈교육비 환불 현황(통계교육원)〉

(명,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9월
교육생 수		5,131	5,547	3,395
교육비 수입액		181	175	135
교육비 환불	대상인원	200	204	110
	금 액	12	9	6

개선방안

- 교육비 환불 잔여분 계산에 대한 환불규정 명확화 필요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교육비의 환불)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시작 이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분을 환불한다. 다만,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 중단 또는 제10조에 따른 퇴교처분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비의 환불)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시작 이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생이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 총 기간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 중단 또는 제10조에 따른 퇴교처분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평가대상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검찰청**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외부강의·회의에 대한 명확한 대가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강의 유형이 유사한 경우라도 강의 대가가 상이함
- 검찰 외부강의 현황 분석
 - 2010년 외부강의 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
 - 100만원 이상 고액강의 건수는 매년 줄고 있으며, 고액 강의료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기부하고 있음
 -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20여만원 상당(직무관련 강의 여부 불문)

문제점

- 고액 외부강의 대가수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국정감사,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일부 판사, 1회 강연료 248만원」 – 조선일보(2010. 10. 6.)
- 「감사원 고액 외부강의 매년 급증」 – 뉴시스(2011. 9. 29.)

- 최근 3년간 외부강의 현황(직무관련성 불문)

구분	전체 신고건수	고액 강의건수 (100만원 이상)	시간당 강의료
2009년	73건	6건(4건 기부)	236,050원
2010년	34건	3건(1건 기부)	361,384원
2011년	54건	3건(3건 기부)	223,571원
2012년 (1~6월)	39건	1건(1건 기부)	223,448원

※ 신고 건수는 신고 의무 있는 경우만 적용(자문, 심사, 평가 등 제외)

개선방안

- 외부강의료를 가장한 금품수수 가능성,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강의료 금액 자의적 해석 등 문제점 보완 필요
- 고액강의 감소 추세이고, 강의료도 대부분 기부하고 있으나, 국민적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 강의에 대한 명확한 대가 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12. 5. 14.)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 **평가대상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병무청**

제8조(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1. 정상 입영대상자

가.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나.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2. 별도 입영대상자

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징병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1)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 재학생입영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

나. 기타 별도 입영대상자 :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결정시 동일조건에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2001년부터 병역이행자 본인이 병역이행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 ('01년 이전에는 병무청 직권으로 결정)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연혁 〉

연도	내 용	비고
2001년	• 지방청 직접 방문 접수(재학사유 입영연기자)	최초시행
2002년	• 인터넷에 의한 본인선택제로 전환	
2004년	• 열차표 예매방식 도입, 실시간 변환시스템으로 전환	
2005년	• 별도입영대상, 국외연기자까지 선택대상 범위 확대	범위 확대
2008년	• 입영기일연기자까지 선택대상 범위 확대	범위 확대
2010년	• 입영일자 선택시 입영부대는 전산 자동 분류	

〈 연도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현황 〉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입영계획	142,978명	142,729명	135,245명	135,909명
본인선택	97,144	94,597	90,914	83,695
%	67.9	66.3	67.2	61.6

문 제 점

- 현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제도는 대학생 등 입영연기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졸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학력차별 해소 및 민원편의 증진 차원에서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본인선택 기회 부여 필요

개선방안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범위를 고졸이하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제8조(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①·② (생략) 〈신설〉	제8조(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방위산업청**

제7조(결격사유 심사) ③ 저가입찰 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제재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현 황

- 현행 결격사유 심사와 관련하여 저가입찰 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을 적용하여도 95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 생산능력 확인과 관련, 방위사업청장이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 제 점

- 업체 신규 진입이 어렵고,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 미약

개선방안

- 계열화, 전문화 폐지에 따른 신규업체 진입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청렴한 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담합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p>제7조(결격사유)의 심사)</p> <p>③ 저가입찰 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p> <p>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p> <p>③ 방위사업청장은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13조(기타사항)</p> <p>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7조(결격사유)의 심사)</p> <p>③ 저가입찰 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서류 점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p> <p>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생산능력확인지침’을 적용한다.</p> <p>제13조(기타사항)</p> <p>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 **평가대상** :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여검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다.

(중간생략)

3. “잔여검체관리자”라 함은 해당 시험검정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현재 시험 · 검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시험 · 검사를 하고, 남은 잔여검체의 보관과 폐기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담당

문 제 점

- **업무처리(잔여검체의 보관 및 활용)에 대한 책임경계가 모호**
 - 부적합품, 무상양여 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리주체를 정함으로써 업무단계마다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
- ※ 동 규정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마약류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등의 시험검체에 대하여 시험 · 검사를 완료한 잔여검체의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개선방안

- 잔여검체 발생부서와 관리 및 처리부서로 **이원화**하도록 개선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여검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다. 가. 「약사법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및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정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 나.~라. (생략). 3. “잔여검체관리자”라 함은 해당 시험검정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 가. ----- ----- ----- ----- -----. 나.~라. (현행과 같음). 3. “잔여검체 발생부서”란 시험·검사 등을 통해 잔여검체를 발생시킨 시험·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잔여검체 처리부서”란 발생부서에서 시험·검사 등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검체 중 잔여검체의 보관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 평가대상 :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관할(지)청장은 상이자가 제2항에 따른 LPG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LPG할인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1년
2. 2회 적발시 : 2년
3. 3회 적발시 : 3년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LPG 개별 소비세 인상분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정지

문제점

- 부당사용 횟수 및 부당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1회 적발만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 부당사용 횟수나 부당사용액이 적은 민원인들의 불만표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정지가 아닌 구두경고 등 재량범위를 벗어난 행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제재규정 실효성 저하)

개선방안

- LPG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최초 적발된 경우, 부당사용 횟수나 부당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반횟수, 부당사용액에 따른 제재내용 구체화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p>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p> <p>① ~ ② (생략)</p> <p>③ 관할(지)청장은 상이자가 제2항에 따른 LPG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p> <p>1. 1회 적발시 : 1년</p> <p>2. 2회 적발시 : 2년</p> <p>3. 3회 적발시 : 3년</p> <p>④ (생략)</p>	<p>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할(지)청장은 상이자가 제2항에 따라 LPG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p> <p>1. 1회 적발시</p> <p>가. 1~3회 사용 또는 부당사용금액 3만원 미만 : 3개월</p> <p>나. 4~5회 사용 또는 부당사용금액 5만원 미만 : 6개월</p> <p>다. 6회 이상 사용 또는 부당사용금액 5만원 이상 : 1년</p> <p>2. 2회 적발시 : 2년</p> <p>3. 3회 적발시 : 3년</p> <p>4. 4회 이상 적발시 : 5년</p> <p>④ (현행과 같음)</p>

- 평가대상 :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조(검사시료 채취량 및 채취방법) ① 검사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된
로트(Lot)별 각 400g(ml)이하를 채취한다.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량을 가감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현 황

- 수산물, 수산가공품은 품질, 규격, 유해물질 혼입 여부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
 -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시료의 수거가 필요하므로,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의 고시로써 수거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문 제 점

- 개정(안)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 수거량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 없이
검사항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민원인이 스스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료 수거량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준수부담이 적정하지 않음

개선방안

- 방사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수거 가능하게 규정.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p>제2조(검사시료 채취량 및 채취방법)</p> <p>① 검사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된 롯트(Lot)별 각 400g(ml)이하를 채취한다.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량을 가감할 수 있다.</p>	<p>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p> <p>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신청된 롯트(Lot)별 각 400g(ml)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이내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p>

- 평가대상 :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재청

제10조 (반·출입의 제한) ① (생 략)

② 다음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삽살개를 재단 사육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1. 보존관리 계획을 기초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삽살개 사육장 외에서 개최되는 삽살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삽살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사육장외 지역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③ (생략)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 황

- 현행 규정은 삽살개 반출 요건으로 ‘보존관리 계획을 기초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문 제 점

-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규정을 신고 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리단체의 자율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삽살개 반출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규정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

개선방안

- 보존관리계획 신고 시의 반출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반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p>제10조 (반·출입의 제한)</p> <p>① (생 략)</p> <p>② 다음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삽살개를 재단 사육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p> <p>1. 보존관리 계획을 기초로 문화재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삽살개 사육장 외에서 개최되는 삽살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삽살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p> <p>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p> <p>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사육장외 지역으로 반출 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p> <p>③ (생 략)</p>	<p>제10조 (반·출입의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삽살개를 재단 사육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p> <p>1. 연초 수립된 보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p> <p>2. ----- ----- ----- -----</p> <p>3. ----- ----- -----</p> <p>4. ----- ----- -----</p> <p>③ (현행과 같음)</p>

- 평가대상 : 산업재산권 판례 성석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특허청

제2조 (응모자격 요건) ①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졸업생,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판례 평석에 응모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현행 규정은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에 대하여,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

문 제 점

-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요건을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판례 평석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격증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 특허심판원장의 자의적 재량판단에 따라 응모 자격이 결정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판례 평석 응모 자격 가운데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의 요건을 명확화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제2조 (응모자격 요건) ①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졸업생,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판례 평석에 응모할 수 있다.	제2조 (응모자격 요건) ① ----- ----- 로스쿨 교수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판례 평석에 응모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일반 기능 계약직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 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제5조(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음주정도 및 경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징계감경을 지양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징계의 감경을 지양’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 . . . 지양하여야 한다”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 자의적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우려

개선방안

- 불필요한 재량 표현을 삭제하고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의무화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p>제5조(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p> <p>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음주정도 및 경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p> <p>②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요구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의한 징계감경을 지양 하여야 한다.</p>	<p>제5조(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p> <p>① ----- ----- 경위 등을 참작하여 ----- ----- -----.</p> <p>②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p>

■ **평가대상 : 인명구조사 운영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정책국의 각 과·팀장
2. 중앙소방학교장
3. 중앙119구조단장
4. 구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조관련 기관·단체·교육기관의 임원·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제6조는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임명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됨

문 제 점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의 불비
 - 위촉위원의 연임횟수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장기연임으로 인한 이해당사자와의 유착 우려

- 위원이 해당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규정 미비

개선방안

-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차수를 2회로 제한
- 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마련하여 공정성 신뢰성 제고

예 시

개정 전	개선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신 설>	제6(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사건에 영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신 설>	
⑥ <신 설>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 2 절

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3. 교육자치단체

01 광역자치단체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6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곡지구 내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제도정비를 위한 조례로서,
- 제36조제1항의 요금경감에 대하여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요금 감면에 대하여 자의적 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존재함

개선방안

- 요금경감에 대하여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항 외의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경감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36조(요금경감)</p> <p>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p> <p>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4조(요금경감)</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요금 경감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개선결과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 경감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평가대상 :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 정당지원단체는 제외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및 문제점

- 현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 심의, 위원회 운영,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필요한 바,
-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선정자의 임의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개선방안

- 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음

에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 정당 지원단체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

개선결과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2. 8. 8〉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8. 8〉
 1.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평가대상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현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 운영 및 활동상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책임 운영과 투명성의 악화로 각종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으므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회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개선방안

-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나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도록 할 필요 있음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p>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p>
--	---

개선결과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현황

- 필요할 경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위탁 할 수 있음.

문제점

-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특정인 특혜 방지대책 미흡
 - 수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이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이나 단체 등을 수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경우 운영능력이 부족한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위탁기간 종료 후 기간갱신에 대한 불공정성
 - 기존 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간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착 가능성이 있음.

※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와 유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갱신은 1회로 제한하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개선방안

- 수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
- 위탁기간 종료 후 기간갱신과 관련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을 1회로 제한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예 시

개정안	개선안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도 홈페이지에

-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신설) 대관령 야외음악당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선결과

-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평가대상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성성 평가 및 지원금액 심의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기업유치위원회는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성성 평가 및 지원금액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

문 제 점

- 위원회 위원의 사익추구 방지대책 미흡
 -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이 지원대상 기업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적성성 평가 및 지원금액 심의 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지원대상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제외 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예 시

개정안	개선안
<p>제18조 (설치 및 구성 등) - 신설 -</p>	<p>제18조 (설치 및 구성 등)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개선결과

제1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 (생략)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가대상 :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조례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모범사업체 선정 · 포상 및 모범사업체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 근거 마련

문 제 점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모범사업체 선정 ·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모범사업체 선정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 모범사업체 선정 · 지원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중단을 위한 자격철회 규정 등 마련 필요
 - 또는 위의 같은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예 시

개정안	개선안
<p>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p> <p>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p>	<p>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p> <p>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 모범사업체는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p> <p>③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p>

개선결과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부적격 사업체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조문 없음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생활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에 비례하여 번호판 발급대행량도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 자동차 등록현황 〉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비 고
640,303대	2,803대	608,530대	28,970대	2011.12월말 현재

〈 차량등록 증가 추이 〉

구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전월	640,284	2,821	608,476	28,987
증감	19	-18	54	-17
전년	617,225	2,718	586,396	28,111
증감	23,078	85	22,134	859

문 제 점

- 차량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지정방법 및 행정절차 등을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및 대행사업자 지정 관련 부패발생 요인 상존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명문화 등
- 대행사업자의 구체적 선정기준 규정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 설	<p>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p> <p>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 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p>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 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개선결과

-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시는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 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2. 비서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의 인사비리 발생
- 친인척, 선거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등 공정사회 구현 저해
- 별정직 채용시의 부적절한 행위 발생등으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
- 정실위주의 별정직 채용 등으로 공직내부의 위화감 조성 및 갈등

개선방안

- 지자체 장의 독단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친인척, 선거시의 논공행상 등에 대한 보은인사 등 특혜발생 요인 원천 차단 필요
- 재량범위, 재량기준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채용요건, 절차 및 임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재량을 행사하거나 채용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민 등 참여보장 및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임용절차등)</p> <p>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 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관 2. 비서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p>제5조(임용절차등)</p> <p>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p> <p>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2.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4.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p>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7. 16]</p>

개선결과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2.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4.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평가대상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② ... 생략

③ 영제 14조제 3항 제 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 가능성

현 황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 · 군수에게 허가 · 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관련법령 및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 신고 처리하고 있음.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해 ‘빛공해’ 관점에서 부패발생 여부 검토 필요

－ 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2012. 2. 1 제정 ※시행 2013. 2. 2

－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조명 기구의 용도별 · 지역별 구체적 설치기준과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 휘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문 제 점

- 추상적·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 및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가·신고 처리로 공정성·신뢰성 저해 우려
 - 개정안 제4조 3항 각호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한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밝기 및 색깔로 광고물을 제작한 후 설치 허가처리 과정에서 불허 될 경우 민원인에게 불이익 발생 될 수 있으며, 무리하게 허가할 경우 과도한 빛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으며,
 -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허가처리 할 경우 부조리 개연성이 있으며, 공정성·신뢰성 저해될 가능성 내재

개선방안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
<p>제4조(전기를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p> <p>① ~ ② 생략</p> <p>③ 영제 14조제 3항 제 5호 및 제4항제 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p>④ 생략</p>	<p>제4조(전기를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p> <p>① ~ ② 생략</p> <p>③ 영제 14조제 3항 제 5호 및 제4항제 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p> <p>④ 생략</p>



개선결과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③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평가대상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 4조의 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 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 5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현 황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광고사업 발전에 기여한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시·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문 제 점

- 지원 절차·기준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기준, 지원절차·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대상자 선정의 예측가능성 결여, 임의·자의적 지원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내재
- 재정지원 사후관리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 결여
 - 위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원신청,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제재 및 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제반규정이 없어 지원금의 부당 집행 방지 및 책임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 결여

개선방안

- 재정지원 절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절차·기준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또는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 검토
-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보고의무 규정, 위법·부당한 지원신청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지원취소·지원금 환수규정 등 마련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등을 위한 지원) ① ~ ④ 생략 신설	제4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④ 생략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선결과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④ (생략)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평가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 ③ 생략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심의 ②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임.

문 제 점

- 기금운용관련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저해 가능성 내재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수탁 기관이 될 수 있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 해당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및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내재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신뢰성 미확보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개선방안

- 기금의 수혜기관 및 업무 수탁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 삭제
-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16조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제16조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2.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3.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본부장 4.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5. 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회계전문가 6.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7. 금융기관의 여신평가 전문가 8.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교수

개선결과

제1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 ③ 생략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2.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3.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4.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5.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6. 공인회계사 및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대학교수등 회계전문가
 7.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로서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나 변호사 및 여성

■ 평가대상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13조(전담기관 지정·운영)에 따라 전담기관을 (재)충남테크노파크로 지정·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교부한 자금(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평가기준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현황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담기관은 ① 사업의 기획·평가 지원, ②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③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④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등을 수행하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청남도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 받을 수 있음.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자격요건·기준 없이 (재)충남테크노파크로 단독지정
- 전담기관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대한 규정, 업무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전담기관이 위법행위시 지정취소 등의 제재규정 및 지정취소에 대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문 제 점

- 전담기관의 독점적 · 계속적 지정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내재
 -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 · 기준 없이 (재)충남테크노파크를 단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독점적 · 계속적 지정으로 인한 각 연구회와의 유착 등 부패개연성 내재
-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 및 위법행위시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책임성 · 공정성 침해 우려
 - 전담기관은 과학기술사업 및 각 연구회의 제안사업에 대한 기획 · 조사 · 분석 · 평가 · 지원 등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되므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 및 위법행위시 지원금 환수, 지정취소 등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책임성 ·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전담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과 지정기간, 지정절차 명시
-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법행위시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 마련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 운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13조(전담기관 지정 · 운영)에 따라 전담기관을 (재)충남테크노파크로 지정 · 운영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 운영) ① 조례제13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2. 3.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년으로 하되, ○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 감독)..... 제19조(지정취소 등).....

개선결과

제1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0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현 황

[언론보도]

- MBC 뉴스 '유기견 방치실태...돈벌이 수단일 뿐?' 2010-12-10
- 대전KBS 뉴스 '유기견 보호소 지원금 '횡령' 의혹' 2010-08-05
- 부산KBS 뉴스 '유기견, 보신탕 집으로' 2010-07-30

[국민신문고]

-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2011.2.) : 유기견 전원이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
- 대전시 수의사협회 유기동물 보호소(2010.6.) : 2010년 6월 한 달 간 자연폐사 121마리, 안락사 1마리.

- 유기동물 · 피학대동물의 방치 및 지원금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 개정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 (조례 제4조)
 - 반기마다 운영현황 보고, 연 2회 이상 관리상태 점검(조례 제5조)

문 제 점

- 동물보호단체의 부실 보호 및 보호비용 부당청구 우려
 - 동물보호법제15조에 의거 적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연2회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동물보호센터에 비해
 - 동물보호단체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보호비용 관리에 대한 통제 장치도 없이 동물보호센터보다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실한 보호조치 및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패개연성 있음.
 - 동물보호단체에 보호조치의 우선권 부여에 따른 특혜발생 가능성
 - 다수의 동물보호단체가 보호를 원할 경우, 위탁자 선정기준이 없어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 유기동물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며, 동물보호단체에 보호조치 하는 규정 없음

개선방안

- 동물보호단체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게 할 경우 부실보호 및 보호비용 부당청구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개선결과

관련 조문 삭제

02 기초자치단체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 조문 없음

평가기준

- 준수 부담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구청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받아야 할 아동·여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보호 및 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저해.

개선방안

- 요금경감에 대하여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항 외의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경감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개선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선결과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평가대상 :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0조(회계및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시설과 인력, 시설별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결산보고서 제출시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에게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수탁자의 공인회계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규정 개선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회계및결산)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및결산)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결과

관련 조문 삭제

■ 평가대상 :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성남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재량권 행사에 따른 하위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재량규정을 존치하는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
- 시장의 방침결정 등에 의해 조례에 명시된 시설의 설치 목적에 관련 없는 사업을 허용할 수 있으며
- 이익단체로부터 영리목적 사업을 허용하도록 청탁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음

개선방안

-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구체화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조(사업)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성남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삭 제)



개선결과

제5조(사업) 식물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물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식물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에 관한 자연학습 교육 및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평가대상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급수공사는 민원인의 급수공사 신청 후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일련의 과정이 우리시 주도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시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급수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불공정함

개선방안

- 급수공사 시행으로 공작물에 손해 시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삭제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공사 시행으로 공작물에 손해 시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삭제



개선결과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2.8.7〉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평가대상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관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하고 있음.
- 민간위탁자 선정의 공개경쟁 미흡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찰대상 법인의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없음.

개선방안

- 민간위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
<p>제5조(운영의 위탁)</p> <p>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운영의 위탁)</p> <p>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개선결과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기준 등)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로 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및 문제점

- 조례 개정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 지원기준(별표) 폐지로 재정지원(항로연장지원금) 지원기준 부재에 따른 투명성 결여

개선방안

- 재정지원(항로연장지원금) 지원기준 구체적 명시
 - 항로연장지원금(별표) 개정안 마련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3조(재정지원) ③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 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생략가능,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대체 가능
제4조(지원기준 등)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 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 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안 마련

개선결과

제4조(지원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규모, 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 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평가대상 :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평가기준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할 경우 민간기관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
 - 지원센터의 기능,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 등

개선방안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할 경우 민간기관 위탁에 관한 세부규정 부재에 따른

1안) 관련조례의 시행규칙 제정

2안)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지원센터의 목적, 위치, 업무 및 기능,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 등 신설

예 시

개정안	개선 의견
<p>제20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p>제20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개 경쟁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성과평가 결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〇〇조(수탁자의 의무)</p> <p>① 제2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p>

개정안	개선 의견
	<p>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〇〇조(위탁취소)</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기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제〇〇조(지도감독)</p> <p>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개정안	개선 의견
	제○○조(관계규정의 준용) 지원세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선결과

관련 조문 삭제

03 교육자치단체

■ 평가대상 :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33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는 있으나 수의계약 공개시기 및 장소가 불명확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외 학교계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개의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 정보의 접근 용이성을 볼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내역 공개시기 및 공개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제36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_____ 예외로 한다. 	<p>제36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p> <p>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_____ 예외로 한다.</p>



개선결과

제33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평가대상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율을 하향 부과
- 대부요건 재량범위 불명확으로 특혜유발 요인 존재

개선방안

-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에 관한 구체적 요건 제시 또는 불명확한 규정 삭제를 통해 특혜유발 요인 제거



예 시

개정(전)	개선사항(예시)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하생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또는 구체적 요건 명시 <이하생략>

개선결과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관련 조문 없음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을 집행시 구체적인 집행방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패 유발요인 상존

개선방안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기관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 설〉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결과

-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가대상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함

문 제 점

- 보조금을 교부조건 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여도 정산서 제출 시 대응투자 실적만 있으면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음
-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필요

개선방안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 마련 필요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p> <p>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p> <p>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p>

개선결과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선발위원회) ①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학교는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도교육감(학교는 교장)이 위촉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학교는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도교육감(학교는 학교장)이 위촉 함

문 제 점

- 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개의 정족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의견 충돌시 해결 방안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혼란 우려
- 소속 공무원 또는 교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위원회의 주 기능이 체육·무용 특기자를 심사·선발하고 있어 위원 본인의 자녀 등이 심사 대상이 될 때에 제척 또는 기피하지 않으면 공정성 문제 유발



예 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7조(선발위원회)</p> <p>①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학교는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도교육감(학교는 교장)이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9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무원 또는 소속 교직원도 위원에 임명 가능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도교육감(학교는 교장)이 위촉” → “위원은 도교육감(학교는 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 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의2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7조(선발위원회 설치 등) ①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해당학교에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교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학교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3 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1.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총평
2.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 추진
3.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01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총평

(1) 추진 배경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윤리·투명 경영 선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나 이러한 규정들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제·개정 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는 2012년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를 추진하여 공직유관단체 규정의 제·개정이 확정되기 전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이 확정되기 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추진 방식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는 우리 위원회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의 추진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3) 2012년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추진 성과 및 진단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풍부한 사례가 담겨 있는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자가 실제 부패영향평가 업무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부패경쟁력평가 대상 기관에 배포하였다.

특히,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를 추진하면서 각 기관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사규 제·개정 예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2007년부터 도입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우리 위원회와 공직유관단체의 공동의 노력으로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2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 추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여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기 전 국민에게 미리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내부적인 절차만 거쳐 제·개정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을 차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의 기회가 없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 사규란?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지침, 요령, 요강 등 공직유관단체가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2년에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규 제·개정 예고의 필요성, 예고 대상 규정, 예고 기간, 예고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규 제·개정 예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가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예고제를 시행토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 및 각 공직유관단체의 노력으로 반부패경쟁력평가 대상 기관 중 118개 기관이 사규 제·개정 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 추진방안 〉

□ 제·개정 예고 시스템 및 관련 규정 정비

- 사규 등이 제·개정되기 전 제·개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검색 가능하도록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

–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기관은 현재 사규를 공개하고 있는 게시판에 제·개정 예고임을 표시하여 예고제 실시

※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리 등의 규정에 사규 제·개정 예고 관련 규정 신설

□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제·개정이 확정되기 전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 법령의 경우는 부처별로 off-line으로만 또는 on-line 및 off-line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채널을 구축

□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

-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는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주로 선정

※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 유형 예시

유형1) 지원 관련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백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으로 규정

유형2) 평가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유형3) 검정 관련 규정

- 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은 장애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유형4) 위탁 관련 규정

-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165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의 임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재임대 요건 규정

유형5) 기금운영 관련 규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등 기금운용규정을 통해 약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운용 규칙」, 「대체투자 운용기준」, 및 「간접투자상품 운용기준」 등을 규정

유형6) 여·수신 관련 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은 개인보증 및 사업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한 산정방법, 보증료율 등 규정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한도, 보증료 및 연체보증료 산정방법 등 신용보증, 기술보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유형7) 심사, 인증 관련 규정

-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은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유형8) 계약 관련 규정

- 한국전력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관련 규정은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규정



□ 제·개정(안) 예고 기간

- 예고기간은 기관 특성에 따라 정하되, 자치법규의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20일 이상을 권장

※ 법령의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며, 자치법규는 20일 이상(행정절차법)

□ 제·개정(안) 예고 내용

- 이해관계자가 제·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이유,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신·구 조문을 포함한 전문 공개
-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의견 접수부서, 의견 제출기간 등의 정보 제공

□ 제·개정(안) 예고의 기대효과

-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관계자가 향후 시행될 규정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 (투명성 제고로 공정경쟁 촉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 제·개정 단계에서 이미 공개되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촉진**
- (규정의 실효성 확보) 사규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보장**되어 향후 규정 집행 시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증대로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참고1.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 규정화 예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사규를 제정·개정·폐지(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규변경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의 사전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사전예고”라 함은 사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사규안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전예고 및 생략) 공직유관단체는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규안을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사규를 사규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사전예고 내용 및 방법) 공직유관단체는 사규안의 취지, 사규안 또는 신규조문 대비표, 의견제출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예고 기간) 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직유관단체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규안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2. 사규 제·개정 예고 내용 예시 〉

000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2. 제·개정 이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나.

다.

※ 조문별로 제·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월 0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000기관 000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주소 : (기관명과 부서명까지 기재)

03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 평가대상 :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

제3조(채용원칙) 계약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직무 또는 한시적으로 소요되는 직무에 대하여 매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증가되는 통계를 보이고 있음

〈 계약직 채용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채용수	5명	3명	3명	10명	12명	33명

- 계약직의 본사는 사장, 지사는 지사장이 채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본사의 승인 사항임
- 그러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함을..”로 규정하여 채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업무담당자의 재량 남용, 특별 채용에 의한 직원의 친인척, 이해관계자 등을 고용할 위험과 이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의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 특히 공개경쟁에 의거하지 않은 채용 방법으로 부적격자 채용·채용과정의 비위행위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직 채용의 근거 규정 제도화 필요

개선방안

- 계약직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을 실시하도록 관련조문 개정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채용원칙) 계약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채용원칙) 계약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 인사관리규정

제50조 (1(갑)직급에의 승격) ① 1(을)직급 직원의 1(갑)직급에의 승격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결정한다.

1. 보직년수 : 1(을)직급에 승격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제51조 (1(을)직급 · 2직급에의 승격) ① 2 · 3직급 직원의 1(을)직급 · 2직급에의 승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승격후보자 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승격예정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승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이내자 중에서 처(실)장 및 사업소장과 본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1. 1(을)직급에의 승격

가. 보직년수 : 2직급에 승격보직된 날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삭제)

2. 2직급에의 승격

가. (삭제)

나. 보직년수 : 3직급에 승격 보직된 날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63조 (3직급에의 승격) ① 4(갑)직급 및 4(을)직급 직원의 3직급 직원에의 승격은 차장 승격고시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특별 승격시킬 수 있다.

1.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차장 승격고시 응시 유자격자
2.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시에 의한 승격이 부적당한 경우

② 제1항의 차장 승격고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전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격제한 규정이 있으나,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와 관련한 징계처분자에 대해 승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른 징계처분자와 동일한 제한을 적용받음
 - 따라서 부패행위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인사관리 기준의 투명성·윤리성이 저해 됨.

개선방안

- 인사관리 기준의 투명성·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와 관련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격제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0조 (1(갑)직급에의 승격) ① (생략) ② (삭제) (신설)	제50조 (1(갑)직급에의 승격) ① (현행과 동일) ② (삭제) ③ 승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 (1(을)직급·2직급에의 승격) ① ~ ③ (생략) (신설)	제51조 (1(을)직급·2직급에의 승격)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승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 (3직급에의 승격) ① ~ ② (생략) (신설)	제63조 (3직급에의 승격)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승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건설자문 위원 및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

제44조 (단가협의 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는 단가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발의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 생 략 --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사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본사 주관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단가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단가협의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단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 단가협의 조정건수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조정 건수	4건	5건	5건	

-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단가협의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 실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 기한 등을 예측할 수 없는 등 이의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 재량권 행사의 남용 가능성

개선방안

- 계약상대자의 단가협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민원인이 업무처리기한 등을 쉽게 확인토록하고, 담당자의 재량을 구체적·세부적 규정할 것

개선결과

개 정(전)	개 선(후)
제44조 (결과의 통보) ④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본사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본사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신설	제44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④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라 단가 협의 결과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결과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주관 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 및 지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본사 주관부서에 재심을 요청하고 본사 주관부서는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역본부 및 지사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및 지사는 재심의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위원의 임기) ② 〈신 설〉

제15조(청렴의무) 〈신 설〉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역세권 개발 및 ○○운영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검토·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사 및 지역본부에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운영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위원 수			비고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79	1,361명	292명	1,069명	관리○○별 1개 운영

- ○○운영자문위원은 ○○개발과 관련된 사업제안, ○○ 내 매장·광고 등 다원사업과 각종 편의시설 및 안내설비 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검토·자문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운영자문위원의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

개선방안

- ○○운영자문위원 위촉 임기동안 ○○공사 또는 ○○공사 계열사가 발주하는 용역·공사 등에 참여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 설〉	<p>제5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된 지역사회 위원이 [별표 3]의 자격상실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해당위원을 해촉한다.</p> <p>[별표3] 자격상실요건</p> <table> <tr> <th>구분</th><th>자격상실요건</th></tr> <tr> <td>공통</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불참한 경우 •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확인된 경우 •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자 • 특정인/사업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업적, 재정적 압력을 행사하는 자 •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려는 등의 의심이 현저한 자 • 본인이 위원직을 사퇴한 때 • 위원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이 사퇴를 결의한 경우 •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직무수행능력 또는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해촉을 통보한 때 </td></tr> </table>	구분	자격상실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불참한 경우 •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확인된 경우 •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자 • 특정인/사업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업적, 재정적 압력을 행사하는 자 •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려는 등의 의심이 현저한 자 • 본인이 위원직을 사퇴한 때 • 위원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이 사퇴를 결의한 경우 •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직무수행능력 또는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해촉을 통보한 때
구분	자격상실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불참한 경우 •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확인된 경우 •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자 • 특정인/사업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업적, 재정적 압력을 행사하는 자 •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려는 등의 의심이 현저한 자 • 본인이 위원직을 사퇴한 때 • 위원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이 사퇴를 결의한 경우 •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직무수행능력 또는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해촉을 통보한 때 				
〈신 설〉	<p>제15조(청렴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서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동안 ○○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 계열사가 발주하는 용역·공사 등에 참여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p>				

■ 평가대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의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 (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물품, 용역계약 및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및 안전성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고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행할 주체로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가 결정됨
-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평가업무에 임하여야 함
- 이를 보증할 수 있는 평가위원 선정방식에 있어 해당 사업주관부서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왜곡된 제안서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음

개선방안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해당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제3부서(예시 : 감사실 등)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 주관부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7조의3(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7조의3(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 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제7조의4(평가위원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3배 이상 평가위원단(Pool)을 구성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여신심사합의체 운용지침

제5조 (의결) ① 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여신 서면 결의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 여신심사합의체 : 신청 여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구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여신지원 가부결정(승인, 부결) 의사 결정 기구인 여신심사 합의체의 서면결의 대상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로 되어있어, 서면결의 과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 상존
- 서면결의는 합의체 개최 및 전체구성원 협의 없이 구성원 각각의 서면결의로 의결이 확정되는 문제점 상존
- 부정대출 발생 가능성과 합의체 위원 전체 정보공유의 한계

개선방안

- 여신심사 합의체의 서면결의 대상을 기존 “필요한 경우”에서 아래 3가지로 명확히 규정

— 아 래 —

1. 차주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부실 위험이 낮은 여신
2. 담보범위 내 여신으로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한 여신의 조건변경
3. 기업구조개선 여신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해당 위원장이 인정하는 여신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 (의결)</p> <p>① 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여신 서면결의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p>	<p>제5조 (의결)</p> <p>① 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주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부실 위험이 낮은 여신 2. 담보범위 내 여신으로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한 여신의 조건변경 3. 기업구조개선 여신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해당 위원장이 인정하는 여신

■ 평가대상 :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직원의 의무 및 기본원칙) ⇒ 제3항 신설

제5조(기본조사계획) ① 기본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지구면적, 보상대상물건의 분포 및 수량, 주민동향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역세분 및 구역별 인원배분
2. 조사기간 및 일정별 조사항목
3. 조사대상물건별 공통적 조사방법 및 기준
4. 소요예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준비) ③ 기본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지구의 구역별 개황과 특성, 조사기법 및 조사기준, 조사대상 물건의 누락 및 중복 방지대책, 민원방지대책, 타인토지 출입시의 행동요령, 각종 조사서식의 기재요령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참가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기본조사는 사업지구 내에 존재하는 토지와 지장물의 현황과 수량 등을 파악하고, 영업권·주거이전비 등 무형의 권리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상대상 물건내역을 확정하는 보상업무의 핵심절차임
- 그러나 업무특성상 피보상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조사가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이 부족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비리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함

- 보상현장의 여건상 조사담당자가 초기 기본조사 단계에서 조사내역을 조작하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사후적발이 어려운 원천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 조사담당자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나 기본조사목록·심사내역에 대한 결재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물건소유자와의 공모를 통해 허위조사나 부당심사로 보상금을 부풀린 후 조사담당자가 이를 착복하는 등 피보상자와의 부패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지침상 허위조사 예방을 위한 조사인력 복수운영원칙을 명시하고 조사서·심사서 등에 대한 결재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본조사 단계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개선결과

개정(전)	개선(후)
제4조(직원의 의무 및 기본원칙) ①~②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4조(직원의 의무 및 기본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조사내역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조사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하여 확정하며, 이후 수정 또는 추가되는 내역은 별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조사계획) ① 생략 1. 구역세분 및 구역별 인원배분 2.~5. 생략 ② 기본조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담당자간의 견해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물건별로 공통적인 조사기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조사함으로써 형	제5조(기본조사계획) 현행과 같음 1. 구역세분 및 구역별 인원배분(기본조사는 공사 직원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현행과 같음 〈삭제〉 (제1항제3호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침 간소화)

개정(전)	개선(후)
<p>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전준비)</p> <p>①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통지, 보상안내책자의 배포 등으로 공익사업의 필요성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기본조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담당자간의 견해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물건별로 공통적인 조사기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조사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기본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지구의 구역별 개황과 특성, 조사기법 및 조사기준, 조사대상 물건의 누락 및 중복 방지대책, 민원방지대책, 타인토지 출입시의 행동요령, 각종 조사서식의 기재요령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참가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 〈신 설〉</p>	<p>제6조(사전준비)</p> <p>① (현행과 같음)</p> <p>〈삭제〉 (제12조의2 신설에 따른 삭제)</p> <p>③ 기본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참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구의 구역별 개황과 특성 2. 조사기법 및 조사기준 3. 조사대상 물건의 누락 및 중복 방지대책 4. 민원방지대책 5. 타인토지 출입시의 행동요령 6. 보상투기 유형 및 대응요령 7.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보상비리 사례 8. 각종 조사서식의 기재요령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서 정한 준비물외에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를 위하여 등산화, 조끼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맞게 구매하거나, 본사에서 일괄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p>

■ 평가대상 : 감사규정

제38조(순환대상 직위·직무 및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순환대상 직위·직무에는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징계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별표6] 순환대상 직위(직무)

〈운영기준〉

1.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음. 단, 담당직무의 종류가 바뀌거나, 사업소 이동의 경우 재차 순환대상 직위 보직 가능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부조리 발생 사례가 있고 업무성격상 장기간 보직 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직위·직무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등 별도 관리 [감사규정 제38조]
 - 최근 5년간의 적발된 부조리 발생사례를 분석 결과, 순환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부조리 발생사례가 현저히 높았음

구분	순환대상 직무	비 순환대상 직무
전체 부조리 발생 비율	63%	37%
금품수수·횡령 등 주요 부조리 발생 비율	74%	26%

⇒ 총 부조리 발생건수 중 63%가 순환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발생하였으며,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주요 부조리에 해당하는 비율은 74%로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

- 더욱이, 최근 2년간 기동감찰팀 운영, 부조리신고센터 개설, 신문고 업서 운영 등 강도 높은 비위행위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순환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부조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금품수수 관련 부조리 행위 징계처분자라도 징계소멸시효(2~5년)가 경과되면 다시 순환대상 직무에 재보직이 가능하여 부조리 행위 재발 개연성 존재 등 제재의 실효성 미흡
- 또한, 순환대상 직위·직무에의 장기보직을 제한하기 위한 운영기준의 ‘예외 조항’이 단순한 포괄적 재보직 인정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부조리 개연성 방지의 실효성 저하
 - 순환대상 직위·직무 再보직 금지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가 현재 보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짧은 기간 담당직무 변경 또는 타사업소로 이동하였다가, 직전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재차 보직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동일 유형의 부조리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부조리 행위 징계처분자 보직 금지 기준 강화
 - (현행) 징계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 가능
 - (개정) 징계소멸시효 경과時에도 再보직 금지
- ☞ 대상 :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 징계처분자
- 순환대상 직위·직무 운영기준 명확화
 - (현행) 담당직무 변경, 사업소 이동時 순환대상 직위·직무 再보직 가능
 - (개정)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再보직 가능

개선결과

현행 규정	개선권고안
<p>제38조(순환대상 직위·직무 및 관리)</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순환대상 직위·직무에는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징계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p> <p>[별표6] 순환대상 직위(직무) 〈운영기준〉</p> <p>1.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음. 단, 담당직무의 종류가 바뀌거나, 사업소 이동의 경우 재차 순환대상직위 보직 가능</p>	<p>제38조(순환대상 직위·직무 및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순환대상 직위·직무에는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삭제〉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p> <p>[별표6] 순환대상 직위(직무) 〈운영기준〉</p> <p>1.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다시 보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직무의 종류가 바뀌거나 사업소 이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직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소, 동일 순환대상 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음</p>

■ 평가대상 : 부보금융기관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경영진 의견청취 등) ① 조사반장은 조사기간 중 파악한 경영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경영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
 - 다만, 조사완료 후에도 조사대상 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장치가 부재

개선방안

- 조사결과 이의제기 통로가 차단될 경우 음성적인 접촉 시도 등의 문제 발생 등이 예견될 수 있으므로 동 조문내에 별도 항으로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 규정을 신설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경영진 의견청취 등) ① 조사반장은 조사기간 중 파악한 경영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경영진 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조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관련 임직원이 공사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평가대상 : 영업운영 업무기준

(조항 신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공사가 ○○ 휴게시설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피평가자인 휴게시설과 평가자인 우리 공사 사이에 평가결과를 매개로 하는 향응, 금품 수수 등 부패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휴게시설 운영업체와 우리 공사 직원 간의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우리 공사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유인하는 조항 별도 신설

개선결과

현행 규정	개선권고안
〈신 설〉	제84조의 3 (청렴의무 위반시 조치) 휴게시설 운영업체 및 운영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공사 감사실 또는 외부기관에 의하여 공사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직원이 받은 징계량에 따라 ‘별표 5’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별표 5〉 휴게시설 운영관리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기준

구분	위반사항	조치기준
기타	바. 휴게시설 운영업체 및 운영자의 금품, 향응제공 등으로 공사 감사실 또는 외부기관에 의하여 공사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징계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함	
	• 동 사유로 공사직원이 해임, 파면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최고)
	• " 견책, 감봉을 받았을 경우	중 경 고
	• "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경 고
	• " 주의처분을 받았을 경우	주 의



■ 평가대상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제24조(퇴직한 임직원과의 거래제한) ① 공단의 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을 팀장 등으로 채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등 자산운용관련 퇴직 임직원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한 거래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공단의 임직원이 재직 중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단의 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을 채용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이내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산운용내부 통제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나,
- 공단이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에 임직원이 채용될 경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함

개선방안

- 임직원이 재직 중 투자한 금융기관 등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직원이 취업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제한 시에도 취업제한 관련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상향
- 자산운용직원에게 받는 준수 서약서에 직원의 취업 및 거래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개정

※ 재취업 제한관련 규정 비교

구분	공직자윤리법	공단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대상	임원	임원 + 자산운용 임직원
취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2년간 유관업체 취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 퇴직전 5년 - 제한기관 : 일정규모 상의 영리 사기업체 및 법무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공직자윤리법 적용 • 자산운용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중 직접투자한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을 원칙적 제한 (예외 : 시장가격 주식·채권 거래, 공모절차 거친 투자 등) <p>※ 유사기관(3대 연기금 등) 중 최초로 도입·운영('11.12월)</p>
거래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전 5년간 직접 투자한 업무 취급시 1년간 해당기관과의 거래 제한

개선결과

현행법령	개선권고안
<p>제24조(퇴직한 임직원과의 거래제한)</p> <p>① 공단의 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을 팀장 등으로 채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등 자산운용관련 퇴직 임직원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한 거래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련법규 및 투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거래할 수 있다.</p>	<p>제24조(퇴직 임직원이 취업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제한) 공단은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여 공단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직접 투자한 업무(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취급할 경우 임직원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다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관련법규, 투자 및 거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다.</p> <p>〈삭제〉</p> <p>제24조의2(공단이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 취업제한)</p> <p>①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p>



현행법령	개선권고안
<p>[별지 제4-1호서식]</p> <p>본인은 금융자산 운용담당자로서 기금 운용규정시행규칙 제29조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직접 투자한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별지 제4-1호서식]</p> <p>본인은 금융자산 운용담당자로서 기금 운용규정시행규칙 제29조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제24조의 임직원이 재직 중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 등의 취업제한, 제24조의2의 임직원이 취업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제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 평가대상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집행한 이후 이를 해제하기 위해 예상구상실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근거 규정 신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가압류 등 채권보전업무 수행시 예상구상실익 산정 방법 등은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나,
- 동 기준에서는 채권보전조치시의 예상구상실익 방법만을 정하고 있고, 가압류 등을 해제할 때 적용하는 구상실익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와 아울러 적용상 혼선이 발생

〈 최근 3년간 가압류 등 채권보전업무 관련 해제 업체수 및 회수금액 〉

(단위 : 개, 억원)

구 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9월말
업체수	273	242	198	145
금 액	117	119	93	70

※ 대상 : 가처분 · 가압류 · 채권보전조치 해제관련 업체수 및 회수금액

개선방안

-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예상구상실익 산정시 준용 규정을 명시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업무 수행 유도



개선결과

개 정(전)	개 정(후)
제11조(예상구상실익 산정) ① ~ ③ (기재생략) ④ (신 설)	제11조(예상구상실익 산정)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채권보전조치 유보 및 해제를 검토 하기 위하여 예상구상실익을 산정 하는 때에는 채무감면규정 제4조 에서 정하는 예상구상 실익 산정방 법에 의한다.

■ 평가대상 : 계약업무 관리세칙

제7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금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업무관리세칙에는 계약사항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계약업무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계약보증금 면제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

- 그러나, 계약업무관리세칙 상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납부 금액 및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납부해야 할 계약보증금을 알지 못하여 행정 절차의 예측이 다소 어려움
- 더욱이, 계약보증금의 면제권한에 대하여 통제장치가 없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계약상대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며,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존재함



개선방안

-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할 금액 기준을 명시하고 납부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금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p>제7조(계약보증금)</p> <p>① 계약담당자는 금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10,000,000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납부기한이 단기인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6. 기타 계약금액이 50,000,000원 이하의 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 평가대상 : 회계요령

제70조(입찰방법) ②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복수의 입찰대리를 통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입찰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복수의 입찰대리를 제한하는 조항 부재
- ※ 공공조달 입찰대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1인 1사 입찰대리제도신설 운영(조달청, 2012.4)
- 입찰대리인의 확인방법 불명확화에 기인한 불법전자입찰 및 불공정한 입찰로 입찰질서 혼란 및 공공조달시스템의 신뢰도 저하 야기

개선방안

- 입찰시 입찰대리인 자격 및 1인 1사 입찰대리제도의 명문화를 통하여 입찰대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선결과

현행 규정	개선권고안
제70조(입찰방법) ②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입찰방법) ②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회계규정

제37조(수납의 원칙)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납입의 독촉) 납입의무자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수입사무에 있어 수납은 현금, 수표 등에 의하여야 하나, 별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 납입기간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나, 사장이 따로 정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문 제 점

- 수납 및 납입의 독촉에 있어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량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단서 규정을 삭제하거나, 예외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입사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

개선결과

현행 규정	개선권고안
<p>제37조(수납의 원칙)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1조(납입의 독촉) 납입의무자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제37조(수납의 원칙)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삭제〉</p> <p>제41조(납입의 독촉) 납입의무자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p>

■ 평가대상 : 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8조(청사관리의 위탁) ① 소관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을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부패통제장치, 재량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현 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8조는 청사관리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자격기준과 위탁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청사위탁용역관리 대상은 공단본부와 5개 직업능력개발원(조경, 부속시설인 수영장 등 포함)이며, 위탁용역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청사위탁관리 용역 현황 〉

(2012. 4. 30. 기준단위 : 원)

시설명	위탁용역 금액	수탁업체
공단본부	579,735,900원	○○(주)
○○ 개발원	287,400,000원	○○서비스(주)
○○ 개발원	321,876,000원	(주)○○종합관리
○○ 개발원	315,528,000원	(주)○○
○○ 개발원	278,206,960원	(유)○○환경기업
○○ 개발원	269,663,210원	(주)○○환경엔지니어링

개선방안

- 청사 위탁용역관리에 있어 위탁기관 선정 방법, 자격기준과 절차를 규칙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선결과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68조(청사관리의 위탁)</p> <p>① 소관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을 할 수 있다.</p>	<p>제68조(청사관리의 위탁)</p> <p>① 소관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을 할 수 있다.</p> <p>② 소관부서장은 청사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 비율(추정가격 5억원 이상)